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곽 건 홍*

1. 머리말
2. 왜 일상 아카이브인가?
 - 1) ‘거인의 아카이브’에서 ‘난쟁이의 아카이브’로
 - 2) 기록공동체 ‘발전’에 대한 성찰로부터
3. ‘거시적’ 국가 아카이브의 한계
 - 1) 아카이브 철학의 부재와 비민주성
 - 2) 기록의 비충체성과 편향성
4. 자본주의 일상의 ‘총체성’,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
 - 1) ‘삶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기록화와 ‘집합표상’
 - 2) 일상 아카이브의 다양한 층위
 - 3) 인문적 아카이브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방향전환
5. 맺음말

* 한남대학교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 역사비평사, 2003; 「노동청기록의 재조직에 관한 연구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제23호, 2010; 「기록관체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국문초록]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아카이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함께 아카이브 소장 기록 또한 매우 편향적으로 과편화되어 있다. 당대사를 표상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아카이브에 소장된 기록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은 거의 없다. 아울러 아카이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아카이브 문화를 창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없다. 따라서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상 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를 의미한다.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한국근현대사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보통사람들의 행위와 고통’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재현해 하는 작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일상성 속에 숨겨진 억압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기록공동체는 권위주의시대와 대비되는 민주주의시대 기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또 보통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기록을 생산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선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록과 아카이브 내용을 문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시대의 시대정신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록공동체가 민주주의시대를 한 걸음 앞당기는 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카이브 성격의 변화를 추

동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일상 아카이브, 국가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아카이비스트, 일상사

1. 머리말

아카이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중세 교회와 도시의 아카이브에는 “권력의 소유와 혈통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의 특징을 간직한 문서들”이 보존되었다.¹⁾ 현대에 이르러 아카이브는 과거와 같이 통치행위의 증거만을 보존하지 않는다. 아카이브는 민주주의 제도 운영 원리에 따라 조직의 설명책임성을 증거 해야 하고, 기록관리 행정을 통한 투명성의 천명을 제도화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문화기관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제도의 ‘과수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카이브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실로 최근의 일이며, 아직 아카이브 문화는 매우 일천하다. 공공부문의 아카이브는 국가기록원,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 등이 있으나, 조직과 인적구성·시설 등으로 보면 국가기록원만이 실질적인 아카이브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아카이브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아카이브는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주제 아카이브의 성격을 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몇몇 기업의 아카이브

1)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 그린비, 2011, 472쪽.

이브 등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작업은 현 단계 기록공동체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²⁾

사회 각 분야에서 아카이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공공 아카이브의 소장 기록 또한 매우 편향적으로 과편화되어 있다. 당대사를 표상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아카이브에 소장된 기록은 행정 행위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을 뿐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은 거의 없다.³⁾ 이 지점에서 아카이브의 존재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기 기록관리 ‘혁신’의 결과로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개인이 관리하거나 아예 기록 자체를 멸실했던 지난 시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일이었다. 또 국가의 중요 기록을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참여정부에서 결정했던 대통령기록관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대통령기록관 건립⁴⁾을 추진하는 반면 서민들의 삶을 아카이빙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카이브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정책일 뿐이다.

이처럼 아카이브에는 당대사를 표상할 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문화는 사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아카이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아카이브 문화를 창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없다. 따라서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2) 광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제22호, 2009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다.

4) 「2014년 세종시에 문 여는 ‘대통령기록관」, 『아시아경제』, 2011년 6월 16일자 참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밝혀 둘 것은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문제제기가 역사학·사회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의 일상사 연구에 영향 받은바 크다는 사실이다.

일상이란 ‘사소하고 반복되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행위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다.⁵⁾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먹고, 입고, 살고 물품을 생산하고, 소비가 삼켜버린 부분을 재생산해야만 한다.”⁶⁾ 그러나 일상은 “그것이 생산하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만족을 공급하지만 동시에 박탈감과 결핍감을 발생시킨다.”⁷⁾ 따라서 일상성에 대한 발견과 해석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다. 곧 일상은 “우리 존재의 기반을 이루며,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생산하는 생활공간”이고, “국가와 자본의 활동영역과 구분되면서도 국가와 자본의 힘에 의해 조직화되고 변형되는 공간이다.”⁸⁾ 따라서 일상성은 “하나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개념을 ‘사회’를 알기 위한 실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일상을 전체 속에, 즉 국가·기술·기술성·문화(또는 문화의 해체)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가능하다.”⁹⁾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상사·문화사·미시사 분야의 연구가 진척되었다. 일상사 연구는 “반복과 진부함으로 어떤 변혁의 전망도 삼켜버리는 블랙홀로서의 일상”이나, “온갖 사소하고 자잘한 것들에 대한 골동품 취미나 심심풀이 한담에 적당한 소재주의로서의 일상”¹⁰⁾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단순한 사람들의 일상이 결코 단순하지

5) 김왕배, 「일상생활의 철학적 의미와 생활정치」,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세계화 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도서출판 대운, 1994, 41쪽.
 6)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98쪽.
 7) 도정일, 「문화, 상징질서, 일상의 삶 - 비판이론의 현대적 전개: 루이 알튀세르와 앙리 르페브르 -」, 『문화과학』 창간호, 1992년 여름, 130쪽.
 8) 김왕배, 앞의 글, 46쪽.
 9)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85쪽.
 10)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않았다는 점”¹¹⁾을 밝히는 것이며, “작은 사람들이 체제를 어떻게 경험했는가”의 역사”¹²⁾를 탐구한다. 즉 “현실적 삶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나날의 정치가 중요성을 가진다면, ‘사사로운 것’과 ‘정치적인 것’의 상호의존 관계가 역사적 재구성 작업 속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따라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인식 없이는 일상성에 대한 인식은 없”으며, “일상성과 사회 전체의 비판 없이는 그리고 그들 상호간의 비판 없이는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도 사회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사회 전체 속에서의 일상생활의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없는 것”¹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사는 “기존의 역사학 저편에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며,¹⁵⁾ ‘새로운 전망’인 것이다.

한국에서 일상사 연구는 주로 전근대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근현대사 분야에서도 일상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소재주의적이고 담론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서구 일상사 개념과 이론 틀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일상을 재단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제 현실에 기초한, 그야말로 대중의 일상에 토대를 둔 일상사 연구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상 아카이브이다.¹⁶⁾

337쪽.

- 11) 데틀레트 포이케르트, 김학이 옮김, 『나치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2003, 10쪽.
- 12) 데틀레트 포이케르트, 위의 책, 401쪽.
- 13) 알프 뤼트케, 「일상생활의 역사서술: 사사로운 것과 정치적인 것」,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정치』, 청계연구소, 1985, 81쪽.
- 14)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31~32쪽.
- 15) 데틀레트 포이케르트, 앞의 책, 27쪽.
- 16)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맥락에 있는 기록학계의 대표적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수걸은 지역의 자치적·분권적 기록관리를

이 글에서는 일상사 이론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일상 아카이브를 개념 정의하였다. 즉 일상 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를 의미한다.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한국근현대사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보통사람들의 행위와 고통’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재현해 하는 작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일상성 속에 숨겨진 억압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마련하고, 공공 아카이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 삶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다양한 형태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였으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이영남은 작은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마을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마을아르페’(Community Arche) 시론 - 마을 차원의 책·기록·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 『기록학연구』 제18호, 2008). 김익한은 지역사회 공동체 민주주의의 재발견을 바탕으로 엘리트 모델을 극복하고, 현장민주주의·생활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삶의 현장을 기록화 하는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을 제언하였다(「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최근 설문원은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공동체)’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기록화하고, 지역의 주체들이 스스로 기록을 수집·생산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최초로 일상 아카이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이었다.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은 민중의 일상생활 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시각에서 김주관은 학제 간에 생활사 연구가 가능하려면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은 물론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록학적 방법론에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사와지방문화』 제8권제2호, 2005).

의 일상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일상 아카이브를 고정된 형태로 설정하지 않는다. 일상 아카이브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아카이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아카이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2. 왜 일상 아카이브인가?

1) ‘거인의 아카이브’에서 ‘난쟁이의 아카이브’로

서구에서 ‘새로운 역사학’으로 등장한 일상사 연구는 “위인·남성·엘리트 위주의 정치적 사건사”를 지양한다. 또 일상사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 망각되어 온 개인과 소집단들을 역사의 무대에 불러내어 그들의 삶과 그 의미를 조명”하고, “사람의 흔적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역사”¹⁷⁾ 서술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일상사 연구자들은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큰 역사’로부터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역사’에 주목하였다.¹⁸⁾ 바로 이러한 일상사 연구의 문제의식은 아카이브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또한 1970년대에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Howard Zinn)은 ‘아키비스트와 신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카이브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17) 광차섭, 「‘새로운 역사학’의 입장에서 본 생활사의 개념과 방향」, 『역사와 경계』 45, 2002, 170~171쪽.

18)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2000, 240쪽.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기록물의 존속과 보존과 이용가능성은 부와 권력의 분배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즉 가장 권력 있고 부유한 층이 자료를 찾고 보존하고, 대중에게 유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가장 막강한 힘을 쥐고 있다. 이는 정부, 기업, 군대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함을 뜻한다.¹⁹⁾

기록물, 문서, 회고록, 구술사의 수집은 사회의 주요 인물들이나 권력자들 위주로 편향돼 있고, 힘없고 무명인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²⁰⁾

새로운 자료들을 기록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더 많은 재원을 쏟는다. 베트남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경험을 기록하기보다, 존 애덤스(미국 제2대 대통령-필자 주)의 글을 수집하고 출판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일 것이다.²¹⁾

즉 하워드 진은 명망가·권력자 등 ‘지배층’ 중심의 기록으로부터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오래된 기록으로부터 현재 생산되는 민중의 기록과 구술 증언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브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한국의 아카이브 성격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폐쇄적’, ‘몰가치적’ 아카이브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주적 가치 지향의 민주주의시대 아카이브로 그 성격을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일상

19) 하워드 진, 『하워드 진, 역사의 힘』, 위즈덤하우스, 2009, 213쪽.

20) 하워드 진, 위의 책, 214쪽.

21) 하워드 진, 위의 책, 216쪽.

사 연구의 성과와 아카이브의 성격에 대한 하워드 진의 문제제기를 기록공동체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일상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 역사학계의 경향성을 반영하여 아카이브의 성격을 일상 아카이브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근현대 일상사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일상 아카이브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아카이브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기록이 없는 역사 서술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진전도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보통 사람들의 삶·육구·필요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 기록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쓰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²²⁾고 고언한 하워드 진의 문제의식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보통사람들 삶의 현장의 기록을 낱알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브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거인의 아카이브’에서 ‘난쟁이의 아카이브’로 전환하는 첫 번째 과제는 보통사람들 삶의 일상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로 이전하는 것이다.

2) 기록공동체 ‘발전’에 대한 성찰로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기록공동체가 이루어낸 성과는 실로 괄목할 만하다. 주로 그 ‘발전’은 공공부문에 집중되었다. 외형적으로 이룬 성과만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과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기록연구직의 배치, 기록관리 국제표준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명백하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 비롯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여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 지방기록관리기관의 미설치, 형식만 갖추고 있는 이름뿐인 공공기관의 기록관, 시간제 계약직으

22) 하워드 진, 앞의 책, 221쪽.

로도 배치되는 기록관리 전문가, 기록관리 방법론의 저발전 등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기록관리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기록학계가 이루어낸 성과도 상당하다. 전문 학회지의 발간과 기록학 석사학위자의 양적 성장, 과학적 기록관리 방법론의 소개와 연구 논문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 전문 연구자의 빈약함, 기록학 전문 교수의 부족 등 개혁 과제도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 기록관리 제도의 일정한 성과만으로 과연 기록공동체의 ‘발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공기록에 대한 개념과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기록관리 방법론을 제도화했던 것은 국가 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세우는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록공동체가 이루어낸 성과를 과연 ‘발전’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발전’을 언급하려면 반드시 그 ‘발전’의 지향과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기록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록공동체의 한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기록공동체를 둘러싼 지향에 대한 논의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논의 자체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기록학계는 아카이브의 활동에 대해 때때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제도화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곧 2010년 초에 불거진 정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 요건의 완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카이브에는 어떤 기록들이 이관·수집되고 있으며, 영구기록을 선별하는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아카이브 활동은 어떤 경향성을 띠는지 등 아카이브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거론한 적이 없다.

최근 대통령기록관의 구술사 프로젝트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박정희대통령 관련 인사 구술채록’, ‘노태우대통령 관련 인사 구술채록’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작 박정희 정권 시기 보통사람들이 그 체제에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떠한 일상적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한 구술 증언을 수집하는 사업은 제안된 바 없다. 또 이러한 대

통령기록관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도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기록공동체는 권위주의시대와 대비되는 민주주의시대 기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또 보통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기록을 생산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선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록과 아카이브 내용을 문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시대의 시대정신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가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록공동체가 민주주의시대를 한 걸음 앞당기는 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카이브 성격의 변화를 추동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록학계의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와 문제의식은 인문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있다. 따라서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²³⁾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 틀을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기록공동체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면 공공 기록관리의 제도적 ‘발전’에 대해 전망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아카이브의 성격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모색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거시적’ 국가 아카이브의 한계

1) 아카이브 철학의 부재와 비민주성

국가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대표 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사례로 아카이브의 지향과 활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기록원 소식’란을 분석하였다.²⁴⁾ ‘국가

23) 카메로 감바코르타, 「일상생활의 경험」,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287쪽.

기록원 소식'란에 실린 채용 정보, 각종 사업 입찰 공고 등을 제외하고, 국가기록원 본원의 '아카이브 이벤트(archival events)'라 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하였다.

'아카이브 이벤트'는 기관의 지향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다. 즉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국가기록원의 이벤트는 모두 15건이었다. '공모전' 4건, 전시 3건, 강좌 2건, 홍보 2건, 기록 기증·수집 2건, 기타 2건 순이었다.

〈표 1〉 국가기록원의 '아카이브 이벤트'

| 구분 | 시기 | 이벤트 명칭 | 대상 |
|----------|--------|----------------------|------------------|
| 홍보 | 2010.4 | 기록문화 홍보대사 위촉식 | |
| | 2011.3 | 나라기록 네티 모집 | 일반 |
| 기증 수집 | 2010.4 | 국민생활정책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 제한없음 |
| | 2011.4 | 복지 대한민국 기록 찾기 기증 캠페인 | 제한없음 |
| 공모전 | 2010.6 | 국제기록문화전시회 관람 후기 공모 | 초·중·고·일반 |
| | 2010.7 | 기록관리 발전 아이디어 공모 | 전 국민 |
| | 2010.8 | 기록생활화를 위한 일기공모 | 초·중·고·일반 |
| | 2011.5 |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 초·중·고·일반 |
| 강좌 | 2010.7 | 기록문화학교 시민강좌 | 일반 |
| | 2011.6 | 기록문화여행 시민강좌 | 일반 |
| 전시 | 2010.6 | 국제기록문화전시회 | |
| | 2011.1 | 기록사랑 이야기전 | 국가기록원 기획전시실 |
| | 2011.6 | 기록사랑 이야기 지역순회전 | 대구·경북, 춘천, 전주 |
| 기타 | 2010.7 | 기록사랑 마을 수요조사 | 지방자치단체 |
| | 2011.3 | 맞춤형 복원복제 처리지원 서비스 | 민간, 공공분야 |

출전: <http://www.archives.go.kr>

24) <http://www.archives.go.kr>.

첫째, 아카이브 이벤트의 명칭에 사용된 레토릭(rhetoric) 즉 수사(修辭)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벤트 명칭에는 ‘기록 사랑’과 ‘기록 문화’가 사용되었다. ‘기록 문화’를 사용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우수성”(기록문화 홍보대사 위촉식)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연결된다.²⁵⁾

추상적 용어인 ‘기록 사랑’과 ‘기록 문화’ 등의 표현 방식은 가치중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무엇을 위한 ‘기록 문화’· ‘기록 사랑’인지 그 지향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활동은 전통시대 기록관리의 우수성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당대 기록관리의 현실을 널리 알리지 않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비틀린 역사를 은폐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통시대 기록 가운데 조선왕조실록만을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규장각에서 수행해야 할 이벤트를 대행하고 있는 점은 기관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둘째,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수요조사’ 추진배경이 “기록원—마을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은 국가기록원의 활동 범위를 마을 단위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이는 중앙 중심적 기록관리 정책의 일면이기도 하다.²⁶⁾

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우리 기록유산 소개’(기록문화학교 시민강좌),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오백년을 넘어서’, ‘기록유산의 영원한 그릇, 우리의 전통 한지’(기록문화여행 시민강좌), ‘조선왕조실록 및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 ‘조선왕조실록 편찬과정 맞추기 등 체험학습’(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기록문화학교, 역사기록관, 2010년 7월) 등이 대표적이다. 즉 조선왕조실록과 한지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전통시대의 기록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ttp://www.archives.go.kr> ‘국가기록원 소식’).

26) 그 밖의 사업 목적은 “마을의 역사, 문화, 인물 등 중요한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동 활용(보존·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마을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록의 기증 캠페인과 수집 공모전은 일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 즉 ‘제1회 국민생활정책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은 “새마을운동, 4H운동, 가족계획, 국산품애용운동, 혼·분식장려, 에너지 절약, 저축운동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부정책 관련 기록물” 등을 기록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여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정책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복지 대한민국 기록 찾기 기증 캠페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다음 대통령선거의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와 맥이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국가기록원의 활동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이른바 ‘녹색뉴딜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살리기’ 기록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의례제작 전통을 계승하여 영상기록으로 촬영·보존함으로써, 범정부적 위기극복 경험을 후대의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고 우리나라의 변화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²⁷⁾이라고 발표하고, 실제로 많은 예산을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일찍이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아카이브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아카이브의 통제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²⁸⁾고 강조했다듯이, 국가기록원의 활동에서는 그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다.

넷째,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이러한 이벤트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평가·수집 전략의 부채를 드러내 준다. 왜 ‘국민생활정책 민간기록 수집’이 새마을운동·가족계획 등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느닷없이 ‘복지정책’ 기록의 기증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 즉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따라 당대를 표상하는 기록은 무엇인지를 조사·연구했는지 의문이며, 충분한 검토 없이

27) 「국가기록원, 녹색뉴딜사업 전 과정 기록화」, 『충북일보』 2009년 2월 19일자.

28)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472쪽.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못 의심스럽다.

다섯째, 국가기록원의 이벤트는 ‘거시적’ 역사적 사건과 명망가 중심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맞춤형 복원복제 처리지원 서비스’의 대상기록물은 ‘3·1운동, 4·19 민주화운동 등 2개 주제의 선언문·성명서류’이며, 이 주제와 관련 있는 “저명인사·문인의 육필원고” 등이다.

여섯째, 공식 사회에 만연한 전시행정도 국가기록원의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2009년 7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주요 사업 가운데에는 ‘기록문화의 실용화 추진’을 목적으로 “훈민정음, 구텐베르크 성경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전시, 전문가 참여 학술회의·국제공동연구 및 기록관리 분야별 장비전 등으로 구성되는 ‘국제기록문화전시회 2010’ 개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록전통과 첨단이 융합된 다양한 관광코스”개발 사업은 ‘한국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보고하였다.²⁹⁾ 즉 기록관리의 내실을 기하는 사업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에 집중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국가 아카이브에는 무엇을 위한 아카이브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아카이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향과 미래 전략도 없다.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기여하는 아카이브 이벤트도 기획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아카이브는 누구를 위한 아카이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기록의 비총체성과 편향성

국가는 ‘사회간접자본의 제공, 사회체계의 재생산을 위한 경찰력 등의 물리적 통제,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사회구성원들이 체제에 순응하

29)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제2차 보고 회의자료」, 2009.7.22

도록 언론·문화 등의 이데올로기적 기구를 동원한다'. 또한 '자본의 축적을 보장하는 생산 영역은 물론 주택·의료 등 노동력재생산과 관련된 소비의 영역, 즉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침투한다.'³⁰⁾ 따라서 국가 아카이브의 기록은 "사회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³¹⁾ 사회 전체에 대한 총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먼저 국가기록원 보존 기록의 성격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당대사 기록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증빙 기록 중심으로 영구기록을 책정했던 기록 처리일정 제도의 역사는 고스란히 국가기록원 보존 기록에 반영되어 있다.³²⁾ 이에 대해서는 "생산기관별로 기록물의 유형 및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I』·『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I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³⁾

국가기록원의 '노동부 기록군'을 사례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노동부 기록군의 생산 시기는 1963년부터 1999년까지이며, 기록 수량은 문서 2,181권, 카드 36권, 사진필름 14권 등이다.³⁴⁾ 노동부 기록군은 기능에 따라 30개 기록계열로 구분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주요 기능 일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30) 김왕배, 앞의 글, 35~36쪽.

31) 최종욱,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비판'에 대한 비판적 소론」, 『어문학논총』 12, 1993, 307쪽.

32) 1960·70년대에 생산된 기록 가운데 영구기록은 인허가 관계 등 증빙성 기록이 72.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률공포 원부 등 법규성 기록 7.5%, 국무회의록 등 정책성 기록 3.7%, 기타 16.2% 등이었다(곽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 역사비평사, 2003, 31쪽).

33)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I』, 2007;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II』, 2008.

34)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I』, 2007, 382쪽.

〈표 2〉 ‘노동부 기록군’ 개요

| 기록계열 | 생산연도 | 주요 내용 | 주요 기록 | 수량(권) |
|-----------------|-----------|---|------------------------------------|-------|
| 고용보험 산재보험 운용관리 | 1972~1999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금 운용, 보험 적용·보상 등 |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진폐관계철(진폐보험급여결정서)』 등 | 249 |
| 산업보건 기준 설정 및 운영 | 1974~1994 | 보건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직업병관정심의회위원회운영 등 |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고시, 예규)』, 『진폐기금 운용계획』 | 43 |
| 임금정책운영 | 1983~1994 | 임금정책 수립, 최저임금 심의, 조정 등 | 『1992년도임금정책(2)』, 『최저임금 심의관계철(1)』 등 | 34 |
| 근로복지 증진 | 1986~1993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운용 등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관계철(1)』 등 | 11 |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1988~1995 |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최, 임원 선출 등 | 『고려용접봉(금속)』, 『전교조 관련철』 등 | 6 |
| 중앙노사협의 회 운영 | 1989~1990 | 중앙노사협의회의 회의 개최, 위원 위촉 등 | 『중앙노사협의회회철』 등 | 2 |
| 법규 | 1963~1995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제·개정 등 | 『근로기준법 개정철』, 『질의 회시』 등 | 864 |
| 소송 | 1972~1996 | 산업재해 등 사건의 소원, 노사간 소송 등 | 『소원소송관계철』, 『행정소송관계철』 등 | 381 |

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I』, 2007, 382~386쪽.

‘노동부 기록군’의 특징은 보존기록이 과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존기록은 노동행정과 관련된 일부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국가가 노사협조주의를 강요하던 시기에 ‘중앙노사협의회 운영’ 계열은 단 2권, ‘임금정책 운영’ 계열은 34권만이 있을 뿐이다. 생산현장에서 노사협조주의가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정부의 임금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는 작업은 국가의 공적인 기록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노동부 기록군’ 문서 2,181권 가운데 ‘법규’ 계열 39.6%(864권), ‘소송’ 계열 17.4%(381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운용관리’ 계열 11.4%(249권) 순이었으며, 3개 계열이 전체 기록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 기능 가운데 일부 기능에 대한 기록만 보존되고 있을 뿐이며, 해당 기능의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노

동부 기록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록원 기록군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³⁵⁾

다음으로 국가기록원 보존기록은 당대사를 표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편향성을 띤다는 점이다. 국가기록원이 기록군의 검색 편의를 위해 설정한 주제 분류표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국가기록원의 보존기록 주제 분류표는 철저하게 행정 중심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즉 행정부 기능을 중심으로 대분류와 중분류가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제 분류체계는 행정기록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국가기록원 기록군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편향성은 역사학에서 일상사 분류를 시도한 <표 4> 한국 근현대 일상사 아카이브 분류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곧 국가 중심적 사고를 반영한 분류표와 사람과 그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거꾸로 아카이브를 바라보는 관점은 분류체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표 3> 국가기록원의 보존기록 주제분류표

| 대분류 | 중분류 |
|--------------|---|
| 1. 행정총괄 | 1)정책 2)통계 3)국가발전·개혁 4)민원 5)역사구명 |
| 2. 일반행정 | 1)법제 2)총무행정 3)내무·지방행정 4)재난관리 5)선거·국민투표·정당 6)감사 |
| 3. 외교 | 1)통상외교 |
| 4. 통일국방 | 1)통일·안보 2)국방 3)병무 4)국가보훈 5)비상대비 |
| 5. 경제일반·재정 | 1)재정경제 2)공정거래 3)조달 4)국세 5)관세 6)금융 |
| 6. 산업·교통 | 1)농산 2)농림 3)해양수산 4)상공·동력자원 5)건설·교통 |
| 7. 공공질서·사회복지 | 1)법무 2)경찰 3)보건·사회복지 4)환경보전 5)노동인권 |
| 8. 과학기술 | 1)과학기술 2)기상 |
| 9. 교육문화·관광 | 1)교육·학술 2)체육·청소년 3)공보 4)문화·예술·관광 |
| 10. 지식·정보 | 1)정보통신·체신 2)특허 |

출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I』, 2007.

35) 국가기록원 보존기록 가운데 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박건홍, 「노동청기록의 재조직에 관한 연구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제23호, 2010; 박건홍, 「기록관체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표 4〉 한국 근현대 일상사 아카이브 분류표

| 1층위 | 2층위 |
|--------------|--|
| 1. 사람과 삶 | 1)노동자·농민·직업 2)아동·소년·청년 3)여성 4)이주·이주민 5)교육 6)도시·시장 7)죄와 벌 8)종교·신앙 8)국가와 일상 |
| 2. 의식주와 근대문물 | 1)의 2)식 3)주 4)통신·운송·교통 5)문물 6)미용·화장 7)병과 죽음 |
| 3. 문화와 여가·놀이 | 1)놀이·여가·운동 2)축제·기념회 3)독서·문학 4)영화·사진·미디어·광고 5)음악 6)일탈·유흥 |

출전: 최규진, 「일상사 사전편찬을 위한 아카이브 영역 분류 시안」, 일상사 사전편찬 워크숍 발표문, 2011.6.

아울러 본고에서는 시도하지 않았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록의 처리일정을 파악하고, 미래 아카이브에 보존될 기록이 당대사의 총체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가 아카이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행정 기능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사람 중심의’ 일상 아카이브로의 변화를 추동하고, 향후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저장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본주의 일상의 ‘총체성’, 일상 아카이브로의 전환

1) ‘삶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기록화와 ‘집합표상’

아카이브는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³⁶⁾이지만, 동시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록

을 선별하여 미래로 전송하는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아카이비스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또 당대의 기록 가운데 어떤 기록을 선별해서 어떻게 남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사람들의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노동하는가? 삶의 공간은 어떤 형태인가?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가? 여가도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시간이란 근본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에 봉사하기 때문”³⁷⁾이다. 삶의 재생산 영역에 대한 기록화는 물론 억눌린 에너지가 분출하는 ‘축제’와 같은 비일상성의 기록화 또한 보통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이처럼 일상 아카이브의 기록화 전략은 삶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 모두에 걸쳐있다.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은 단순히 미시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상은 개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지만, 집단과 국가 차원에서도 일상적 행위가 발생한다.’³⁸⁾ 즉 ‘삶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기록화는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이 공유하는 행동양식 즉 ‘집합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s)’ 으로서의 기록화 전략도 필요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일상의 총체성으로서의 일상 아카이브는 사회 전체의 일상적 구조까지도 시야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적인 경험은 부분적으로는 개인사적 인터뷰에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전적인 스케치에 담겨있다. 우리는 그러한 개별적인 기록을 경찰과 법원의 기록으

36)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25쪽.

37) 최종욱, 앞의 글, 314쪽.

38) 김상우, 「'일상생활의 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문화와 사회』, 1권, 2006, 115쪽.

로 보충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와 정치구조를 겨냥하여 일반화하는 접근 방법과 일상의 모순을 담고 있는 경험을 겨냥하여 개별화하는 접근 방법 모두를 포기할 수 없다.³⁹⁾

예를 들어 정부의 공적 기록 가운데에는 노동자문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정부의 노동행정 기록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일상적 삶을 포착할 수 있는 기록을 집적해야 한다. 즉 “공장에서, 노동자 사이에서, 협동조합에서, 소모임에서, 학교에서, 선술집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⁴⁰⁾ 알려면 다양한 노동자계급의 행동양식을 기록화해야 한다.

따라서 기록의 총체성을 확보하려면 ‘거시적’ 아카이브와 ‘미시적’ 아카이브의 결합, 개인과 집단에 대한 기록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기록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일상 아카이브의 다양한 층위

‘국가적 기억’을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1969년 설립된 정부기록보존소는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한국 현대 기록관리 역사에서 국가 아카이브의 존재 자체는 최근까지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카이브 문화의 확산과 아카이브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정부·시민사회·학계 등이 협력 모형을 만들어 다양한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아카이브 사이의 연대를 통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분명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

39) 데틀레트 포이케르트, 앞의 책, 93쪽.

40) 레온 트로츠키 지음, 김진업 옮김, 「습관과 풍속」, 『실천』 31호, 2009, 123쪽.

이다.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궁극적으로 한국적 아카이브 문화를 창달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상 아카이브는 어느 한 기관이 구축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아카이브에서 보통사람들의 일상에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서비스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례로 2010년도 국가기록원 계획에 따르면,⁴¹⁾ 인터넷 공모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1960·70년대의 ‘국민생활사 관련 기록 수집’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다. 예시로 든 주제는 “새마을운동, 근검절약, 저축운동” 등 국가 정책에 관계된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시행자, 참여자” 등에 대해 구술 채록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보통사람들에게 가해진 “국가에 의한 일상생활의 왜곡”이라는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일상생활의 유린”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⁴²⁾ 비틀린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 만큼이나 그 속에서 살아간 보통사람들의 삶도 왜곡된 것이 사실이다. 국가 아카이브 수준에서 일상 아카이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 전환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해방 이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수많은 잘못된 역사 전개과정에 동원되었던 보통사람들의 삶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또한 그들의 기록을 수집하여 궁극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기여하는 국가 아카이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곧 민주주의시대에 걸 맞는 국가 아카이브의 모습을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보통사람들의 일상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생산된 지방기록 가운데 해당 지역에 대해 의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담은 기록은 거의 없다. 과거의 사기록이나 구술기록, 또는 현재와 미래의 지방행정 기록들이 지방 아카이브의 주요

41) 국가기록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

42)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263쪽.

보존기록이 될 것이다.’⁴³⁾ 따라서 앞으로 설립될 지방 아카이브는 과거의 기록을 수집하는 문제의식과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일상 아카이브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주지역의 ‘이야기가게’ 프로젝트 사례는 앞으로 설립될 지방 아카이브(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록을 수집하고,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어떻게 수집하고 소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장터를 드나드는 지역 주민, 특히 토박이 노인이나 아주머니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사는 가게’⁴⁴⁾에 대한 사례는 지방 아카이브가 일상 아카이브로서의 성격을 띠는 데 일정한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보통사람들 삶의 기억을 기록화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일상성을 발견해 내는 작업이야말로 일상 아카이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기록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노동부 기록관에서는 기록 처리일정을 설정할 때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기록을, 통일부 기록관에서는 새터민들의 삶의 기록 등을 영구 보존할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이들의 관련 기록들을 수집할 수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아카이브에 대한 철학과 지향의 문제이다. 어떤 기록을 기록화하고,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주적’ 아카이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와 관련이 있지만, 민주주의시대 아카이브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과 같은 지역 공동체,⁴⁵⁾ 성소수자 공동체 등 공동체 아카이브도 일상 아카이브로서의 성격을 띠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

43) 지수걸, 앞의 글, 271쪽.

44) 지수걸, 「‘구술사 하기’와 지역문화운동」, 『역사연구』 19, 2010, 229쪽.

45) 강원도 사북청년회의소는 『탄광촌의 삶과 애환』을 발간하고, 그 역사를 정리한 바 있다(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2001). 1970-80년대 광산노동자의 생활, 탄광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등 탄광촌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책자 발간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북면에 ‘탄광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그들의 삶의 기록을 모으는 작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한 CLGA(The Canadian Lesbian and Gay Archives)는 1973년에 설립되어 레즈비언·게이·트랜스젠더·양성애자 등 성소수자 개인과 조직에 대한 기록, 사진·영상 기록, 정기간행물, 각종 기념물 등을 수집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⁴⁶⁾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앞세워 시위에 참여한 것은 1997년 노동법 날치기 반대 투쟁부터였다.⁴⁷⁾ 그들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 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의 삶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 설립을 한국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민주주의 시대에는 ‘거시적’ 국가 아카이브에 대비되는 온전한 ‘일상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야 한다. 보통사람들의 삶의 일상을 낱낱이 기록화하고, 수집하여 전시하고, 이벤트를 통해 그들을 아카이브 기록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곧 자본주의사회의 일상성을 변혁하는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인문적 아카이브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방향전환

한국사회는 아카이브의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키비스트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다. 다만, 기록관리법령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를 규정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을 채택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와 행위규범을 정하고 있다. ICA 윤리규약에 따르면,⁴⁸⁾

46) <http://www.clga.ca/collections/index.shtml>

47) 김조광수, 「여섯빛깔 무지개엔 희망 가득」, 『한겨레신문』 2011년 7월 15일자.

48) 이상민, 「ICA 아키비스트 윤리규약」, 『기록보존』 제12호, 정부기록보존소, 1999, 263~276쪽 참조.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선별·보존·이용 등 기록관리 과정에서 기록의 원본성과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도록 그 규범을 정하고 있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로부터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직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라는 것은 효율성·노동생산성과 관련된 자본의 논리이며, "자신의 전문 기술에 거의 완전히 몰두하고 매일매일 그 기술을 수행하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해당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계획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지 숙고해 볼 시간이나 여력, 의지조차 갖지 못한"⁴⁹⁾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동의한다면, 또는 민주주의 사회는 보통사람들이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가 되는 자유로운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시민"⁵⁰⁾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민주주의시대 아카이브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아키비스트는 비록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카이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성찰해야만 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 아카이브는 '온전한 기록 없는 아카이브'라는 특성 말고도 정부 시책에 순응하는 정책과 이벤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에도 국가 아카이브에 보존되는 기록은 정책 결정과 집행 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배계급'의 기록만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것이다. 이는 중세의 아카이브 기능과 다를 바가 없다.

아키비스트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기록화하지 않고, 그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엇을 이 시대의 기억으로 전승하려 하는가?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일상 아카이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49) 하워드 진, 앞의 책, 206쪽.

50) 노암 촘스키, 강주헌 옮김, 『지식인의 책무』, 황소걸음, 2005, 58쪽.

위해서는 사람들 삶 중심의 인문적 아카이브로 변화시키고 아카이브를 대중화하는 것, 보통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시대 시대정신을 표상할 수 있는 아카이브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성의 틀에 갇힌 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가 아닌 인문주의자로서의 아키비스트로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아카이브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에 초점을 둔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시대는 어떤 아카이브를 요구하는가, 아카이브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상 아카이브의 개념, 일상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범주를 정리하고, 일상 아카이브 구축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일상 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로 개념 정의하였다.

둘째, 국가적 수준의 아카이브는 물론 주제 아카이브의 성격을 띠는 몇몇 아카이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아카이브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그들 삶의 일상성 속에 감추어진 자본주의적 소외현상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

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시대 역사의 주체인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재구성하기 위한 저수지로서의 일상 아카이브가 요구된다.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민주적 가치 지향의 민주주의시대 아카이브를 만드는 과정이다.

셋째, 일상 아카이브는 다양한 층위를 갖는 만큼 사회 각 분야의 여러 범위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국가 아카이브 수준에서는 ‘국가와 일상’을 매개로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대중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애환과 일상을 기록화 하고, 기록을 수집하여 그들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낼 수 있다. 또한 보통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일상 아카이브를 구현해 낼 수 있다. 노동 아카이브는 노동자 일상의 기억을 기록화 하여 ‘그들만의 삶의 분위기’를 탐구할 수 있게 하고, 성소수자 공동체 아카이브는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기록 매체에 따라서도 일상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다. 사진 아카이브는 근현대 대중의 일상에 주목하여 주거와 의상, 음식, 도시화, 전쟁 속의 일상 등과 관련된 사진 기록을 모을 수 있다. 아울러 술 아카이브·놀이 아카이브 등 보통사람들의 의식주와 여가, 문화를 매개로 일상 아카이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곧 ‘위로부터의 아카이브’는 물론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브’에서도 일상 아카이브는 가능하다. 이처럼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는 자본주의사회 보통사람들의 일상성 속에 은폐된 소외현상을 밝혀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문적 아카이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일상 아카이브를 구체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1) 공공·민간 부문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가 보유한 보통사람들 삶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사·분석하고, 가칭 ‘보통사람들의 일상 기록 지도’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시대 아카이브로의 변화를 추동할 국가 정책의 전환과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한 아카이브를 ‘아카이브 화(化)’하는 작업 즉 국가가 보유한 보통사

람들 일상과 관련된 기록을 서로 연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사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대중들 개인의 삶과 집단의 행동양식을 ‘집합표상’하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통사람들의 일상 기록하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유린당한 보통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작업, 이미 사라져 버린 피맛골과 같은 서민들 삶의 공간을 기록화 하는 일, 이주노동자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 등 그 과제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있다. 이러한 과제는 기록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 각 부문과 연대를 통해 풀어가야 할 일이다.

(3) 한국사회에서 일상 아카이브를 구체화하려면, 기록공동체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와의 공동 연구, 다양한 시민사회와 지역 조직, 활동가들과의 연대와 실천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심화시키고,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여 한국 사회 속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a Paradigm Shift to Archives of everyday life

Kwak, Kun-Hong

No one can deny the harsh reality that archival culture has not yet been permeated extensively into all the spheres of our society. Only fragmented records in fixed areas are in the custody of archives. Records to build a living memory for the history of our present are hard to find or remain minimal, if anywhere. Above all, there are few records in archives concerned with the everyday life of common people. No consideration has not been made about the reason for being of archives, not to mention of the strategy for establishing the archival culture. Accordingly, a paradigm shift is required for archive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everyday life of common people.

Archives of everyday life means one which interprets the behaviour and experiences of individuals(groups) within the context of society through categorizing everyday life of common people into the lesser fields. And archives of everyday life also means an organization or facility/place which documents the everyday life of individuals(groups), and collect, appraise, select and preserve the records from the view point of humanities for the reconstruction of history from the bottom. Archives of everyday life is an attempt to reconstruct memory and records on behaviour by and torment of the common people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on the basis of which we

can seek out the oppressive structure in the daily life of capitalism.

Archival community should discuss about what is the meaning of records in the age of democracy unlike that of authoritarian era. We also need to have definite direction on the what kinds of records are to be created and appraised from the standpoint of common people. We are to make it possible to create *Zeitgeist* in the tackle of records and archives' content. on this kind of attempt archival community could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forward a more advanced democracy, resulted in having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essence of archives.

Key words: archives of everyday life, national archives, community archives, archivist, history of everyday life